

대교협 창립 25주년
특별기획



III

대교협에 바란다

- 김신일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김우식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 장인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 최현섭 | 강원대학교 총장
- 윤종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손경식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한삼희 | 조선일보 논설위원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대교협에 바란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982년 발족한 이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교협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전국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80년대 민주화와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 협의체로서 발족한 대교협은 그동안 대학교육에 관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조정 역할을 해 오고 동시에 각종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개발, 정보 제공, 대학평가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대학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고등교육 수요 증가와 대학의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등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배출된 풍부한 인적자원은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달리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취약한 국제경쟁력 등 대학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국제화 시대의 도래, 저출산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등 최근의 환경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자원을 강점 분야에 집중시키는 특성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BK21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연구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학과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집중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학들이 각자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역량도 개선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구조개혁, 지방대학 역량 강화 등이 아직은 시작 단계인만큼 대학의 역량 및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촉진과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학의 내부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내용,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 교육과정이나 학사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야 하며, 연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고등교육의 질 보증(quality assur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 교류 확대에 따른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과 호환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 수준의 평가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들도 평가를 대학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올해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우수

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기울인 높은 관심에 비해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학사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바,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 관리에서 졸업 관리로', '투입 관리에서 교육의 과정·성과 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공부하는 대학',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개별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개별 대학과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교협이 다양한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개별 대학 수준을 넘어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해 주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을 생산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 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대교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육인적자원부도 항상 대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의 변화 노력을 지원해 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다 함께 역량을 모으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피츠버그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장, 교육부 정책심의위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부총리 겸 제8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982년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간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학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확대 등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여 국내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권영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사의 라자 곱타(Rajat Gupta) 전(前) 회장이 “21세기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The war for talent)의 시대”라고 언급한 것처럼 세계 각국은 산업계, 학계 할 것 없이 우수인재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국은 세계 100위권 내 대학 및 연구소의 석학 1,000여 명을 초빙해 자국 내 상위 100위권 대학에 10명 정도씩 배치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111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도 2004년에 ‘해외동포부’를 신설하고 전 세계 134개 국에 분포해 있는 ‘해외 거주 인도인(NRI, Non-Resident Indians)’ 네트워크 1,000여 개를 정부와 연결, 인재 확보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의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를 디딤돌로 삼아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존자원의 빈약함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인적자원 양성에 힘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학구열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좋은 결과를 일궈 낸 주체는 바로 대학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지식산업의 발전과 산업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양적 인프라 위에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01년~2006년까지 조사한 '대졸 근로자의 대학교육 만족도'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우리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양적으로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 및 연구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힘을 모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진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오직 차별화된 능력만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오늘날 우리 대학들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학들도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여 뒤지지 않을 선진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교육 체제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제도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는 스스로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학은 산업계와의 인력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산업계는 대학에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 순환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의 지원이라는 책임을 살려 대학과 산업체 양 기관의 관계자 모두가 맡은 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갖추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조정 기능을 통해 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을 가능케 하는 매개자의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협의회의 빛나는 발전은 물론,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자산인 인재 양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뻗어 나가는 우리나라 대학의 눈부신 내일을 기대합니다. **김우식**

김우식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전임교수를 거쳐 연세춘추사 주간, 공과대학장, 대외부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국과학기술인협회 공동회장, 연세대학교 총장을 거쳐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상훈 경력으로는 연세학술상, 대통령표창, 교육공로상, 경영문화대상, 프랑스 외인 작위(라랑드 뽀르롤의 바이이 기사), 청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대교협의 창립 초기를 회고하며



장인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이 글을 부탁 받고서야 대학교육협의회가 창설된지 25년이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잠시 교착되는 감회에 젖기도 했다.

생애의 대부분을 교육행정에, 그것도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 바쳤었지만 현역을 물러난 지 10여 년, 그 후로는 오블관언으로 대학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 온 터였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자기 손으로 세워서 키운 대교협(大教協)이 벌써 4반세기의 연륜을 쌓았다는 사실조차 염두에 없었다면 야박하다는 책망을 들어 싸지 않은가 자책하면서, 우편으로 받은 팸플릿을 립 밴 원클의 기분으로 들추어 보았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초대 사무총장인 필자가 실제상 창설한 기구이다. 필자가 이 기구의 설립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면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의 간곡한 의뢰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1982년 2월 말인지 3월 초 경, 문교부차관으로 재직하던 정태수(鄭泰秀) 박사로부터 “대학에 대한 문교부의 간섭을 지양하고 대학사회의 문제를 자율적 역량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문교부와 대학 중간에 전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두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문을 받고, 대학 자율에 대한 원칙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대학이 그만한 자율역량을 발휘해 줄지, 그리고 그런 판에 정부가 통제를 선선히 늦추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요지로 답해 준 일이 있었다.

보름 쯤 지난 어느 날이던가, 鄭차관이 퇴근 길에 필자의 집에



들러, 그 협의체 설치 문제에 대해 연두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니 장(張) 선배(그는 언제나 필자를 그렇게 불렀다)가 자리를 옮겨 그 일을 맡아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처음엔 난처했다. 당시 필자는 사학연금공단(私學年金公團) 이사장으로 재직한지 2년이 된 참이었고, 공단 업무도 초창기 빈약한 운영 체제를 벗어나 안정 궤도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남은 임기가 1년이지만 당시의 관례로 한 임기(3년) 연임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어서, 앞으로 4년은 편안하다고도 할만한 일자리에 있는 처지였으니, 앞길에 '의문'이라고 여긴 기관을 신설해서 그리로 자리를 옮긴다는 데에 마음 내킬 리가 없었다.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러나 그 사양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 다음번인지 다음 다음번인지, 거듭된 간청에 필자가 졌다. 아니 졌다고 보다 그 열의에 감동했고 대학 자율화에 대한 그 신념에 깊이 동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양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이다, 부닥쳐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이다. 은근한 용기가 치솟기도 했던 것 같다.

그해 4월 2일 대학교육협의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발족되면서 동시에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창설 업무가 시작되었다.

초기, 이 창설 업무를 둘러싼 여건은 가히 황무지를 일구는 것과 같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대교협 설치의 문교부 방침은 鄭차관 한 사람만의 주장이었지 문교부 내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못마땅한 태도였다 하며, 당시의 장관조차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것을 차관이 우겨서 대통령 보고 자료

에 끼워 넣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차관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관료조직이다. 그러니 문교부의 지원은 애당초 바라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대학 측의 분위기도 마냥 시무룩하기만 했지 반가운 기색은 찾기 어려웠다. 당시, 설립 발기인을 맡아 준 모 대학총장(뒷날, 문교부장관도 역임)도 문교부의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또 허울 좋은 어용기관 하나 만드는구나 하다가 당신이 사무총장을 맡는다 하기에 ‘어! 이것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후일담을 필자에게 들려준 일이 있었다. 대교협 회원인 총·학장들의 대부분과 여타 대학 구성원들의 대교협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시시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삽화다.

이 기구의 출범을 두고 1982년 당시의 시대배경이나 대학사회의 현실 여건과 연관지어 어떤 역사적 필연성과 시대적 요청이 있어 그에 순응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유의 논설을 더러 대해 본 바 있다. 물론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했었기에 이 기구가 없어지지 않고 4반세기에 이르도록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 기구를 창설한 당사자로서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러한 필연성이나 요청을 감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솔화다. 과연이 될지 모르지만, 시대적 요청이 먼저 형성되고 그것에 떠밀려 대교협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교협을 창설함으로써 깊은 잠에 빠지고 있던 그 시대적 요청을 흔들어 깨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도 필자는 당시의 차관 정태수(鄭泰秀) 박사의 시대를 투시한 안식(眼識)과 고립된 처지에서도 신념을 뚫어내고야 마는 용기에 경의를 바치고 있다.

시작서부터 부닥친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할 틈은 없다. 사무총장이 된 뒤로도 필자는 사학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4개월간 겸직해야만 했고, 네댓 사람의 요원을 채용했지만 사무실도 집기도 없이 공단 이사장실 옆의 골방에 몰아넣어 설립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설립에 관한 일체의 실무는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구병림(具丙林) 박사에게 맡겼다.

具 박사는 문교부 시절부터 필자가 가장 높게 평가했던 행정가며 학자였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모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려는 바로 직전에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필자의 행운이기도 했다. 그의 해박한 식견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끊임없이 솟는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필자가 좌절의 고배를 들지 않고 견뎌냈지 않았을까? 후일 그가 필자의 후임으로 사무총장직을 승계한 것도 필자 개인과 대교협 의 발전을 위해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로 여기는 터이다.

그러나 사람은 얻었다 해도 재정이 받쳐주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닌가? 회비가 제대로 걷히기 전, 얼마나 궁했으면 필자가 개인적인 지우를 내세워 몇몇 사립대학 이사장을 찾아 설립 경비의 기부를 호소하러 다녔을까. 그런 가운데서나마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다. 그 중 한 양대학교의 설립자인 고 김연준(金連俊) 박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한 대 구입하라며 선뜻 거액을 회사해 주신 일은 지금도 필자 마음속에 따스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대외적 인식 면에 있어서도 출범 직후의 대교협은 차가운 시선 앞의 별거승이었다. 특히 국회와 같은 정치판에서는 야당이 대교협을 대학에 족쇄를 채우는 어용기관이라 몰아세우면서 해체해야 한다며 떠들었고,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시큰둥한 태도로 제대로 응대하려 들지 않았다. 저간, 그런 국회의원들과 교섭이 있을 때마다 필자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울분의 가지가지는 남의 짐작에 맡길 뿐, 차마 입

에 담기를 삼가는 바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문교부 출신의 이대순(李大淳) 의원이 문공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고전분투 대교협을 옹호해 그 명맥을 이을 수 있게 해 준 일이다. 이 의원은 나아가 “대학교육협의회법”까지 제안 성립시켜서 이 기구의 터전을 결정적으로 굳혀준 분이다. 입법에 즈음한 그의 제안 설명문은 우리 대학교육사에 길이 남겨질 탁견(卓見)을 담은 명문으로서 관계 연구 인사의 일독(一讀)을 권하고 싶다.

아울러, 그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참여한 몇몇 대학교수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국회의원이 왜 대학사회의 자율화를 위한 기구를 반대하는지 모를 일이다”고 진술함으로써 험뜯고 이기죽거리는 반대 의원들의 입을 봉해버린 일도 고소하게 회상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여기 소개해 둔다.

한 5년이 지난 5공 말기 쯤에도 대교협은 한번의 위기를 겪었다. 학원안정법(學園安定法) 소동이 그것이다. 나날이 격화되어가는 학원 내 시위사태를 더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 “학원안정법”이라는 새 법률안이 발의되고, 대교협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명의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어 달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필요도 없고 정치에 말려들기도 싫어서 거절했더니 그 압력이 문교부로 돌아가 문교부 주최 전국 총·학장회의에서 지지성명을 채택해 발표하고 말았다.

얼마 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말썽이 되어 문공위원회에 불려나가게 되었는데, ‘어용단체’를 매도하는 야당의원들의 공격을 대교협의 지지결의가 아님을 해명함으로써 피해 나갔나 했더니, 역으로 여당 측으로부터 “왜 문교부로 책임을 돌리느냐”, “땀땀이 학원안정법을 지지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격



렬한 반발을 받게 되었고, 여당 내부 어떤 중요 당직자 회의에서조차 '시국관'이 의심스러운 대교협 사무총장의 진퇴가 거론되던 끝에 대교협 자체의 존폐 문제마저 언급되더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었다. 이때도 여당 내 요직에 있었던 이대순(李大淳) 의원이 노력하여 사태를 수습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국회나 정부 기타 일반의 대교협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1990년 4월 1일, 재직 만 8년을 채우고 필자는 사무총장직을 사임했다.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일이 있다거나 어디 갈 자리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대 변혁의 시대를 맞아 구시대를 살아 온 자신의 사고로는 자칫 대교협의 진로를 그르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의 회장과 문교부장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상, 대교협 창립 초기의 그늘에 가려졌던 사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 이런 유 글의 체재를 위해서라도 대교협, 아니 대학사회 전체를 향해 한 두 마디 의문을 제기해 충언에 갈음할까 한다.

모두에도 말했지만 대교협의 팸플릿을 10여년 만에 뒤적거리려 보다가 어떤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교수(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한 수치다.

필자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교수 1인당 학생 수로 보아왔다. 그런데 그 수가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도 39.4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필자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20년 전의 것보다 더 악화한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동안에 개선은커녕 악화로 돌아섰다는 의미이

며, 10대(臺)를 넘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무시하더라도, 국내 하급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의 15.0명, 중학교의 19.4명은 물론, 초등학교의 23.9명(이상 문교수첩의 '06년 4월 1일 기준 통계에 의하여 산출)보다도 현격하게 열악한 것이 우리 대학의 수업구조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대학교육이라 불러도 되는 걸까?

옛날에는 교육재정에라도 핑계를 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학교 교육비 구성비'가 2.2%라니,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치다. 더욱이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가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높고 중·고등학교보다 대학(고등교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 수준에 따른 정상적 상승선을 긋고 있는데, 어쩌서 교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보통 교육 단계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정상적인 하강선을 그어가다가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러 저토록이나 갑작스런 반등을 보이는 걸까? 도대체 그 돈을 우리 교육구조 중 최악의 취약점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교수의 증원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단 말인가?

옛날, 대학교육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37명에 육박한다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수치를 참담하게 쳐다보면서도 "우리도 뒷날 OECD에 가입할 때쯤이면 20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다졌던 필자였기에, 그 OECD 가입이 성사 된지 10년도 더 지난 오늘날, 눈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너무나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대교협을 떠날 무렵, 이른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사회의 분위기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다.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의 이행



이었으나 더러는 이상한 느낌을 주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 그 중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대학을 그 구성원, 그것도 학생을 제외한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생활공동체로 보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총장은 대통령에, 교수회는 국회에 해당된다는 식의 논리를 공개된 세미나에서 당당히 발표하는 교수를 본 적도 있다. 자신이 대학에 대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없었다.

대학은 학생교육을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며 교수는 그 교육기관의 목적인 교육을 위해 고용된 종사자라는 원초적인 명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혹여 이런 염려스러웠던 행태가 세월과 더불어, 세류(細流)가 대하(大河)되듯, 대학사회를 휩쓸어 버리지나 않았는지? 혹여 그 분류(奔流)에 휩쓸린 초옥(草屋)의 잔해가 저 기형적인 통계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립 밴 윈클 같은 필자의 처지라, 스스로의 의문이 망상이거나 착각에 기인하였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측면에 대한 대학사회 자체의 일별(一瞥)을 간구해 마지않는 것이다.

-2007. 3. 2 분당 우거에서 

장인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국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문교부차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저작권법 원론』 등이 있다.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신뢰하고 존경받는 대학교육협의회를 기대함

- 국가가 지향하는 자율과 개방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문교부의 대학 관계 업무를 정책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며,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획기하는 대학인의 여망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의 공통과제를 각 대학의 참여와 협조 속에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 시행하는 능률성과 대학 간 협동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 종래의 획일성과 경직성 및 정부와 개별 대학 간의 일방통행적, 하향적 행정 체제를 탈피하여 대학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통해, 대학들이 지향해야 하는 대학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및 책무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고등교육의 성숙기를 조기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대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양양하며 대학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 중 앞의 둘은 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제안 설명서 및 대교협 20년사에 기록된 대교협 설립의 이념과 목적 중 일부이며, 끝은 대학교육협의회법의 목적 조항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대와 바람을 밝히는 서두에 이같은 내용을 꺼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초심과 혼'의



최 현 섭
강원대학교 총장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 중심에 ‘초심과 혼’이 없으면 발전과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5주년을 맞아 대교협은 무엇보다도 먼저 ‘설립 당시의 정신과 목적과 계획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언행에 혼을 담았는가?’ 를 자문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러지 않고 지나가는 행사로서의 25주년을 맞는다면 대교협은 신뢰하고 존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주년 행사와 발간한 20년사를 차근차근 돌이켜 보라. 그 후 5년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라. 상기하는 의미에서 20년사에 있는 다음의 글을 한번 읽어보자.

- 상기 열거한 과제들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협의회’ 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이러한 시대적 노력을 통해 회원대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21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협의체로서의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금 회원대학들은 과연 대교협을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협의회’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관료화 되어 있다’, ‘사무국을 위한 대교협이다’, ‘큰 대학 중심적이다’, ‘정치화 되어 있다.’ 등과 같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말까지 들린다. 다소 감정적이고 오해와 과장이 심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교협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평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교육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별도로 설립하려 하는 것은 대교협에 초심과 혼이 가득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최근 들어 대교협이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대교협이 어떠한 조직인가? 이 나라의 지성과 학문의 중심체인 대학교가 회원이고 이를 대표하는 총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며 입법 조직이 아니던가? 굳이 몇 주년이기 때문이 아니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더욱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바탕 위에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 발굴과 담론 주도에 나서기 바란다. 대교협 총회가 열릴 때 쯤이면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바짝 긴장할 정도로 무게 있는 사업과 담론을 발굴하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나 당장의 관심사에 치중하면 대교협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문계 전반의 위상이 크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업과 담론이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어



렵다. 그러나 지난해 대교협이 주장하고 나선 대학자율추진기구 구성의 경우만 보면 심층성과 신중성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만약 선언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수없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자율화 노력과 문제에 대한 좀더 깊은 고찰을 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내놓고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대교협의 주력사업이던 대학평가도 그렇다. 그것이 주력사업이라면 외국의 대학평가 진화과정과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부터 했어야 한다. 대학들이 저항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전략과 수단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고, 교육부가 고등교육평가를 설립하여 컨설팅 방식의 평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로 대교협 업무의 과감한 축소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법에 따르면 대교협은 대학의 교육제도나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등 9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회원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조성방안, 대학평가와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해 장관에 건의하는 것들이 아닐까 한다. 나머지는 대학의 크기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대학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기능과 상당히 중복된다. 만약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면 대교협의 기능과 위상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능의 집중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평가 기능은 더 강화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과 무관하게 평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 내는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전문 평가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책 및 조성방안, 각 대학들의 경영 진단이나 혁신 전략 수립 등 전문 컨설팅기구로서의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대교협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로 사무국을 전문적이고 경쟁력 높은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의 성격상 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은 대교협의 위상과 위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장들이나 임원들은 소속 대학의 업무 때문에 매력도 높은 사업이나 담론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교협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소속 대학 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절하기는 정말 어렵다. 곧 임기를 마치는 권영진 회장의 '대교협의 회장은 상근직이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퇴임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무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려면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량의 수월성과 사무국의 경쟁적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사무총장과 직원들은 모두 한발 앞서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계적인 대학 혁신 동향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대학과 총장들의 어려움과 고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성사시킬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역량이 뛰어난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충분한 보수와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강력한 역량평가와 인센티브제 그리고 퇴출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원들의 전문가적 마인드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르고 훈련하는 자율적 학습 풍토와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공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기구들이 변화와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 대교협은 축하받아 마땅하지만, '초심과 혼'이 가득한 일대변신을 통하여 회원대학들이 흠족해 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존중을 받는 대교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현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4년부터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 사회교육학회 회장, 전국 국립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학교정책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학교교육력제고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국립거점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사회문화』(공저), 『사회교육연구 : 이론과 실제』(공저), 『현대 민주시민교육론』(공저), 『미래학 입문』(공저),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공저), 『한국교육문제론』(공저), 『강원교육과 인재 양성』(공저), “교과교육발전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모형 연구” 등 다수가 있다.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대교협에 바란다

우선 창립 25주년을 맞는 대교협의 발전에 축하를 보낸다. 그동안 대교협과는 공동연구도 하고, '대학교육'의 편집위원도 했다. 그 밖에도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인연을 맺어 왔던 필자로서는 대교협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부터는 대교협이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교육'을 꾸준히 받아 잘 읽고 있으며, 대교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대교협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대학평가 사업을 조만간 정부가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 담당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교협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사실 대교협은 대학들이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에 대학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대학평가 사업은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 대학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대교협의 커다란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이라는 잡지도 대학 구성원들에게 많이 읽히는 잡지이며, 내용들이 충실하여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대교협의 여러 가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교협이 보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다 확실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쓴 소리를 두 가지만 하고자 한다.

첫째,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대학교육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대학들이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다. 이는 그동안 대교협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대교협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다. 아무리 대교협이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놓아도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3불정책을 정부가 고집하고 있으니 대교협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대교협이 보다 강력하게 정부에 대학 정책대안을 건의하고 실현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교협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 제 목소리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 자립이 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대교협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대교협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 대학평가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평가는 형식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고, 평가인정제로 정착되지 못했다. 대학평가 결과 정보가 그냥 회원대학들 간에만 공유되고 있을 뿐 일반인이나 학부모들이 대학마다의 현 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교협의 또 다른 설립 목적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양양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대교협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대학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과감하게 대학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회원대학의 종합순위가 공개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에 대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대학이 대학다워야 대학이다. 대학은 한 나라의 장래를 보장하고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척도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대교협 창립 2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적어도 정부가 대학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교협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모든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윤종건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과제와 전망)』, 『21세기의 학교조직 경영론』,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특별기획Ⅲ 대교협에 바란다

대교협에 바란다

오늘날 지식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의 산실인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대학들은 우수한 기술과 양질의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82년 출범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육제도의 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개발 등을 통해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육이 최근의 급속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인력은 구직에 허덕이지만, 정작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은 대부족이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등 곳곳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가 분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손 경 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동안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 등 대학평가 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

대학교육의 국제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대학평가 체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물적·인적 교육 여건에 관한 투입중심의 양적 평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괴리된 공급자 위주의 평가라는 지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성과 및 학습결과 등을 고려한 결과중심의 질적 평가와 산업계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중심의 평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학생의 절대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앞으로는 대학교육 및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총 정원보다 대학 지원자의 수가 적어지는 신입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교육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교육이 수요자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학의 운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대학들이 종전과 같은 양적인 성장에만 안주한다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질적 발전 위주의 경영 관행이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여 우리 대학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대학교육협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원**

손경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한일은행 근무를 시작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전무, 사장, 부회장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CJ그룹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별기획 Ⅲ 대교협에 바란다

대교협은 더 분발해야 한다

대교협 창립 25주년을 축하한다. 대교협의 여러 업적과 교육계에 남긴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대교협이 더 분발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4년 넘게 교육 사설을 써 오면서 겪은 두 가지 장면이 기억에 떠오른다. 하나는 2004년 9월 20일 열렸던 대교협 간담회다. 간담회엔 대학총장 33명이 모였다. 대교협은 그 간담회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대학총장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교등급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동결의 형태로 밝혔다”고 했다. 총장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대입 개선안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당시는 서울 주요 사립대가 고교등급제를 했느니 어땠느니 해서 교육부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던 때다.

그런데 대교협 모임 바로 열흘 전에 서울지역 주요 대학 입학처장 9명이 모여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입시에 대해 교육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다. 대학의 입학처장과 총장 생각이 정 반대일 리는 없다. 그런데 대학끼리 모였을 때는 “자율을 달라”고 했다가 대교협이 주선해 모였을 때는 “교육부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총장 모임에 참여했던 정운찬 당시 서울대총장은 나중에 “우리가 무슨 공동결의를 했다는 말이냐. 고교등급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화를 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2005년 2월 대교협의 연례 대학평가 결과를 취재할 때 일이다. 기계공학부 평가에 참여했던 서울 공대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의 어느 교수에게서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평가를 교수 4명씩으로 구성되는 9개 팀에서 했다. 팀당 평균 9개 대학씩 맡았다. 그런데 전체 순위 1등부터 3등까지가 어느 한 평가팀에서 나왔다.” 어느 평가팀에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점수가 박하게도 나오고 후하게도 나왔다는 뜻이다. 당시 평가에서 서울대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이 일이 있는 후 서울대는 아예 대교협의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창립 25주년을 축하해야 할 자리에 듣기 거부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낸 것은 그 두 가지가 대교협 발전의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교협 홈페이지는 대교협 설립 목적을 “전국 4년제 대학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대교협은 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로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조정하고 학생선발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며 매년 학문 분야별로 대학평가를 해 왔다.

대교협의 창립 25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3불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포함한 대학 자율권 확대 없이는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문제를 다 대학에 맡겨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대교협은 대학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서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대학으로는 교육부에 할 수 없는 얘기를 대교협이 모아서 무게를 실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대교협이 교육부 주문을 받아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교육부 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의 기구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학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대학평가는 철저히 해야 하고 산출한 평가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학교를 고르게 된다. 기업은 신입사원 선발에서 대교협 평가를 참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학문 분야별로 어느 대학이 우수하고 어느 대학이 더 노력해야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대학 간 활발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봐주기식 평가, 평가단 교수끼리 담합하는 평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평가로는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 100위권 내에 5개, 10개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앞날이 밝아진다. 대교협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하고 둘째, 엄정한 대학평가로 대학들에 자극을 줘야 한다. **대학**

한삼희

1981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일본 쓰쿠바대학교 환경과학연구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건팀장, 법조팀장과 교육·노동·복지부 등을 출입했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환경팀장을 맡았다. 그 후 독자부장, 환경전문기자, 사회부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환경기자클럽 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현재 조선일보에서 ‘한삼희의 환경칼럼’을 연재하고 있다.